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넘어야 할 과제는

1 2조 자원 2 4~37弗 천차만별 가격 3 누구부터 접종?

5600만명분 확보, 1억600만회 규모 총 2조 필요... 마련예산 1.3조 불과
“화이자·모더나에 접종수요 몰릴듯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무료접종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구매 비용을 제외한, 접종 시행비만 총 2조원 가량이 더 투입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백신 접종 시행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고, 코로나19 접종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해 무상 접종 물량을 예년보다 크게 늘리며 발생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 무료 접종, 시행 예산만 2조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까지 코로나19 백신 5600만명분을 확보했다. 대부분 1인당 2회 접종 기준으로, 총 1억600만회 규모다. 구입 비용은 2조원이 넘게 필요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까지 백신 도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1조3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41일만에 400명대로 떨어진 1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장갑을 교체하고 있다(왼쪽). 한산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



코로나19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장갑을 교체하고 있다(오른쪽). 한산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 /손진영 기자 son@

백신 접종 비용에는 백신 비용과 접종 시행비가 포함된다. 지난 해 독감 백신 접종 시행비가 1만901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억600만회의 접종 시행비에 산은 2조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에는 아직까지 접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2조원은 전체 국가예산에서 보면 부담이 크지 않지만 2조원이란 추가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확보한다면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건강보험은 누적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2019년 한해 적자 규모(2조8243억원)의 93%를 이미 근접했다.

예산은 물론, 세부적인 백신 접종 계

획도 없이 무료 접종 계획이 먼저 밝혀지며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는 “다음 달 무료접종이란 말은 좋지만, 현재 국내에 갖고 있는 백신은 전혀 없고, 언제 어떤 백신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누구부터, 어느 백신을 맞고, 어떻게 백신을 들여와 어디서 접종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 ‘누구는 4달러 백신, 누구는 37달러 백신?’ 형평성 문제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에서 확보한 4개사의 백신 가격은 1회분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4달러, 얀센 10달러, 화이자 19.5달러, 모더나 32~37달러 수준이다. 가격이 최

대 6배 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무료 접종이 시행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수요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가장 먼저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률은 60% 수준으로, 화이자(95%), 모더나(94.5%)보다 떨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의료진 대상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맞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예방률은 차이가 없지만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운반해야 하는데 유통망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어 대체로 모더나 백신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예방률이 높고, 임상 데이터가 많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일괄 무료 접종을 하는 것보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 등으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백신 유통업체 선정도 쉽지 않은 전망이다. 물류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백신 유통 제안서를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 무료 접종 계획이 밝혀지며 백신 공급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물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의 대형 물류업체들은 이미 백신 공급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영하 70도라는 콜드체인 구축은 물론, 운송, 보관 과정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수입은 기대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길 경우 감당해야 할 비난과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독감 백신 운송 과정에서 일어난 백신 상온 노출과 같은 사고가 재현될 것이라 우려도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무료 독감 백신 물량을 운송한 신성약품은 처음으로 독감 백신 조달 계약을 따낸 업체였다. 정부가 독감 백신의 무상 공급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공급 가격을 예년의 60% 수준으로 책정한 이유가 컸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올 세계경제 4~6% 성장 ‘V자형 반등’ 기대

전경련, 올 키워드 ‘V.A.C.C.I.N.E’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급성장 전망
美 1.8~4.8%, 中 7.9% 성장 예상
선진경제 정부부채 126% 육박할 듯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올해 글로벌 경제와 비즈니스 확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일곱가지 특징을 ‘백신’(V.A.C.C.I.N.E)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제시했다.

백신은 ‘백신형 경제회복’(Vaccine-Shaped Recovery),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 ‘미친 부채’(Crazy Debt), ‘중국의 반격’(China Will fire), ‘ESG 투자시대’(Investment in ESG), ‘글로벌 뉴딜 열풍’(New Deal is Everywhere), ‘환경이 경제다’(Environment is the New Economy)의 영문 앞 글자를 따 조합한 용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에 따라 ‘V자형’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은행 등 주요 경제기관들은 백신 보급에 힘입어 올해 세계 경제가 4~6%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미국은 백신 접종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률이 최저 1.8%에서 최대 4.8%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7.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

〈전경련이 꼽은 올해 세계 경제 키워드 ‘백신’〉

키워드	내용
V (Vaccine)-Shaped Recovery (백신형 경제회복)	본격 백신접종으로 세계경제성장률 -4%에서 4~6%대로 V자형 경제회복 기대감 ↑
A (America is Back) (미국의 귀환)	바이든의 新미국, 다자주의 국제통상질서로의 복귀 및 자유무역 동맹 집결하여 중국과 대결구도
C (Crazy Debt) (미친 부채 : 국가부채 팽창)	각국 대규모 확장재정과 저금리로 경기부양, 유동성 과잉에 따른 부작용 우려
C (China Will fire) (중국의 반격)	시진핑의 중국몽, 공급망 자립과 방대한 내수로 영향력 확장
I (Investment in ESG) (ESG 투자시대)	코로나 위기 속 수익률로 증명된 ESG 투자시대 도래
N (New Deal is Everywhere) (글로벌 뉴딜 열풍)	각국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 핵심테마는 그린&디지털
E (Environment is the New Economy) (환경이 경제다)	생산부터 수출, 거래, 세금까지 규제하는 기후변화 어젠다

운데 유로존은 작년 세계 최저수준 침체(-7.4%)에서 벗어나 반등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은 백신 보급 속도가 느려 성장률(3.4%)이 주요 20개국(4.7%)보다 낮을 전망이다.

전경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국제통상체제를 주도하는 선동력을 회복하고, 자유 무역 강 동맹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다자체제에 복귀하면서 예측 가능한 통상질서가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멕시코·유럽연합(EU) 등 동맹국과의 관계 회

복에 힘을 기울이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협상 등 통상협정 참여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사상 최저 금리에 따른 부채 급증은 올해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말 전 세계 부채가 역사상 최대치인 277조 달러에 이른 가운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집행한 주요국 공공부채는 크게 늘 전망이다. 미국 등 선진경제의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는 2019년 대비 20.3% 포인트 증가한 125.6%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제철 노조, 2년만에 총파업 예고

오늘 확대간부, 14일까지 파업 진행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지난 2019년 이어 2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해 전방산업 부진과 원재료 가격 인상 등 이중고를 겪은 현대제철은 올해 중국발 철강 감소 등으로 올해 실적 반등을 기대했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쟁 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철강업계의 위기를 감지하고 빠르게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과 대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현대제철 5개 지회는 오는 12일 노조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총파업 지침’에 “사측은 2020년 임단협 교섭이 15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단 한차례라도 성의있는 교섭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수차례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노조가 파업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는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며 “노동자를 우습게 여기는 현대제철 경영진을 응징하자”고 말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생활안정 지원금 300% ▲노동지원권려금 500만원 ▲교대 수당 2만원 인상 ▲상주호봉

2호봉 신설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 정기인상분을 동결하고 경영정상화 추진 격려금 100%와 위기극복특별 격려금 100만원을 제시했다.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사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경쟁사인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지난해 3분기 임단협이 타결됐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에 29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후 전방산업인 자동차 업계가 살아나면서 2분기 영업이익 140억원, 3분기 영업이익 334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현대제철은 그러나 올해 자동차 강판 가격을 3년만에 인상할 가능성과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철근 수요가 증가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조선업체들의 잇단 수주와 중국 탄소 저감 정책 일환으로 올해 조강 생산량을 줄이려고 경영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제철은 올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는 현대차그룹의 변화에 발맞춰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수소비전을 제시하며 수소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연초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경영정상화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